



KIEP 기초자료 18-21

2018년 9월 14일

최근 한반도 정세 변화와 북일 경제협력 과제

이형근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동아시아팀 선임연구원

(hklee@kiep.go.kr, Tel: 044-414-10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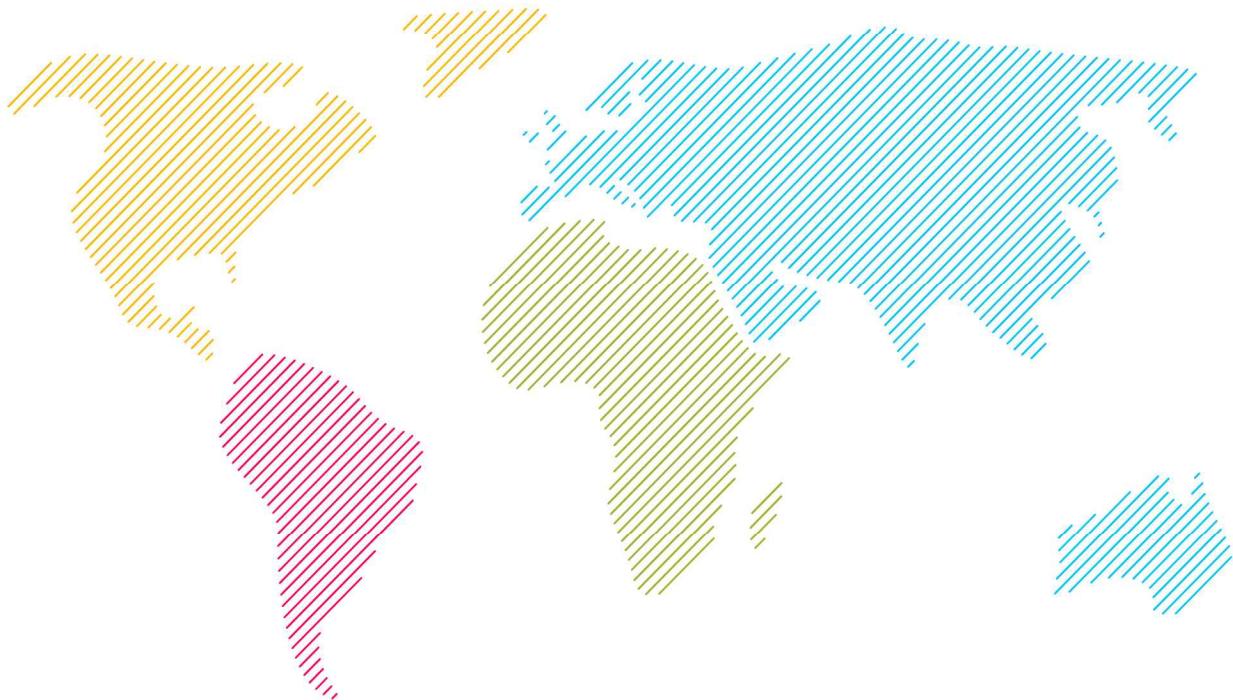
최유정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통일국제협력팀 전문연구원

(choiyj@kiep.go.kr, Tel: 044-414-1187)

최근 한반도 정세 변화와 북일 경제협력 과제

요약

- ▶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개선되어 남북·북중·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한반도 정세가 크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본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남북·북미·북중 정상회담의 주요 합의사항은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 안보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비핵화 논의가 진전되기 전까지 구체적인 대북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비핵화와 관련해 북미 간 비핵화의 개념과 시나리오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해 논의의 진전이 어려운 상태에 있음.
 - 대북 제재 해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미국은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 이후 대북 제재 해제와 경제 협력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반면, 북한은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관계개선)를 동시·단계적으로 추진한 것을 요구.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의 조기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북미 정상회담 이후 일본은 외무성(6월, 8월), 정보기관(7월) 등을 통해 북한과 접촉함으로써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있음.
- ▶ 2002년 9월 북일은 평양선언을 통해 국교정상화 협상 추진, 과거사 반성에 기초한 보상, 납치 등 유감스러운 시태의 자발 방지, 핵미사일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신뢰에 기초한 협력관계 구축 등의 4개 항목에 합의함.
 - 특히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북일 간의 과거 역사 문제의 해결방법으로서 재산권 청구의 상호 포기와 함께 국교정상화 후에 무상 자금협력, 저금리 장기차관 제공, 인도주의적 지원, 일본국제협력은행의 응자, 신용 제공 등의 실시에 합의함.
 - 또한 2014년 5월에는 북한 내 모든 일본인에 대한 재조사 및 이에 따른 일본의 독자적인 대북 경제제재 해제에 합의함('스톡홀름 합의').
 - 그러나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일본인납치 문제의 미해결과 이에 대응한 일본의 대북 제재 조치에 따라 양자간에 실질적인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함.
- ▶ 아베 총리가 6월 북미 정상회담 이후 일본인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직접 대화에 대한 의지를 잇달아 피력함에 따라 북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음.
 - 향후 북일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정세의 진전과 함께 양측 간에 존재하는 납치 문제 및 비핵화의 현안 타개가 무엇보다 중요함.
 - 일본의 대북 경제협력은 핵사찰 비용 부담 → 인도 분야 협력 → 자금제공 등 경제협력과 같이 단계적으로 진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 이후 대북 경제협력은 현재 왜곡된 북한 경제구조를 개선하여 장기 성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실현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일본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한일 간 소통과 협력의 강화가 긴요함.



차례

1. 연구 배경
2. 최근 한반도 정세 변화
 - 가. 한반도 정세 개관
 - 나. 한반도 정세 관련 핵심 쟁점: 비핵화 및 대북 제재
원화·해제
 - 다. 북한의 경제정책 기조 변화와 북일 경제협력의 필요성
3. 북일 경제협력의 역사와 최근의 여건 변화
 - 가. 북일 무역·투자 관계
 - 나. 기개최 북일 정상회담과 경제협력 합의 내용
 - 다. 북일 경제협력 관련 최근의 여건 변화
4. 북일 경제협력의 진전을 위한 과제

참고문헌

1. 연구 배경

■ 2018년 들어 남북·북중·북미 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한반도 정세가 크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고심 중임.

-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2018년 2월) 참여를 계기로 남북 관계는 ‘대화와 협력’ 국면으로 전환됐으며, 이후 남북 정상회담 2회(4, 5월), 북중 정상회담 3회(3, 5, 6월), 북미 정상회담 1회(6월) 등이 개최됨.
- 아베 총리는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이후 일본인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직접 대화에 대한 의지를 잇따라 피력하였음.

■ 과거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평양선언, 스톡홀름 합의 등을 시도했으나, 북한의 일본인납치 문제 미해결과 잇따른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함.

- 북일은 2002년 9월 평양선언을 통해 국교정상화 협상 추진, 과거사 반성에 기초한 보상, 납치 등 유감스러운 사태의 재발 방지, 핵·미사일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신뢰에 기초한 협력관계 구축 등 4개 항목에 합의함.
- 일본과 북한은 2014년 5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한 정부 간 협의에서 북한 내 모든 일본인에 대한 재조사 및 이에 따른 일본의 독자적인 대북 경제제재 해제에 합의함(‘스톡홀름 합의’).
- 2000년대 초반까지 일본은 북한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었으나, 2002년 일본인납치 문제 및 북핵 문제 대두 등 북일 간 관계 악화에 따라 양국간 교역이 급격하게 감소했으며, 2009년 6월부터는 교역이 전면 중단됨.

■ 지난 6월 북미 정상회담 이후 일본 내에서는 북한과의 정상회담 추진과 함께 대북 제재 해제를 전제로 한 경제협력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 현재 북일 관계의 3대 키워드는 비핵화, 일본인납치 문제 해결, 전쟁배상(대일 청구권)/경제협력이라고 할 수 있음.
- 일본은 여전히 북한에 대해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인식을 보이고 있으나(『2018년 방위백서』), 최근 3단계 대북 지원 (핵사찰비 지원 → 인도적지원 → 경제협력)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향후 한반도 긴장 완화와 북일 간 관계 개선에 따라 대북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남북·북중·북미 정상회담 등 최근 한반도 정세 변화를 개관하고, 북일 교역과 대북 경제협력 관련 과거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에 대한 검토와 함께, 6월 이후 일본 내에서 진행된 북일 간 관계개선 추진 내용을 정리한 다음, 북일 경제협력의 진전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2. 최근 한반도 정세 변화

가. 한반도 정세 개관

■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개선되어 남북·북중·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한반도 정세가 크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본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2017년 북한은 6차 핵실험(2017년 9월),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2017년 11월), 핵무력 완성 선언(2017년 11월)을 단행 하였으며, 미국 또한 북한에 미사일 폭격 위협(2018년 2월)을 기하는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었음.
- 그러나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2018년 2월) 참여를 계기로 남북 관계는 불과 2개월 만에 ‘대화와 협력’ 국면으로 전환되었고, 남북 정상회담(4, 5월), 북중 정상회담(3, 5, 6월), 북미 정상회담(6월)이 잇따라 개최됨.
- 북한이 주변국과 6차례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와중에도 북일 간 대화는 진전이 없는 것으로 보여 최근까지도 ‘재팬 패싱’(일본 배제)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美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7월 베트남에서 북일 정보기관 간에 극비 회담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짐.¹⁾
- 일본은 외무성에 동북아2과를 신설하여 북한 문제를 전담하도록 하였음(7월 1일).²⁾
- 지난 7월에는 베트남에서 기타무라(北村鶴) 내각 정보관이 북한 노동당 김성혜 통일전선전략실장을 만나 납북자(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짐.
- 8월 28일에는 북한이 스파이 혐의로 억류하였던 일본인을 조건 없이 전격 석방함에 따라 북일 관계가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음.
- 만약 금년 중에 북일 정상회담이 추진된다면, 이는 2004년 고이즈미(小泉純一郎) 일본 총리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회담 이후 14년 만에 개최되는 것임.

표 1. 북한의 제6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 주요 일지(2017년 말~2018년 8월)

일자	사건	주요 내용
2017. 9. 3	북한 6차 핵실험 단행	-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결의안 2397호(2017. 12. 22) 통과
2017. 9. 21	뉴욕 UN 총회	- 文 대통령,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초청
2017. 11. 20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 美 트럼프 대통령, 북한을 테러지원국 재지정
2017. 11. 29	북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 핵무력 완성 선언	- 北, ‘화성-15형’ 발사 성공, 국가핵무력 완성’ 성명 발표
2018. 1. 1	북한 신년사 발표	- 北, 평창동계올림픽 파견 및 남북대화 의지 표명
2018. 2. 9~25	평창동계올림픽	- 北, 예술단 공연(2.11) 및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1) “I remember Pearl Harbor”: Inside Trump’s hot-and-cold relationship with Japan’s prime minister”(2018. 8. 28).

2) 「外務省、北朝鮮専門の課を7月に新設 日朝協議に備え」(2018. 6. 26).

일자	사건	주요 내용
2018. 3. 25~28	북중 정상회담(1차)	-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첫 번째 정상회담 - 北, 6자회담 복귀 의사 밝힘
2018. 3. 31~4.1	폼페이오 美 국무장관 방북(1차)	- 비핵화 문제 사전 조율 추정
2018. 4. 1	남한예술단 평양단독공연	- 평양에서 '봄이 온다' 개최. 김정은·리설주 관람
2018. 4. 27	남북 정상회담(1차)	- 4.27 판문점 선언 합의(상호 교류 활성화 등 남북 관계 개선,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전쟁 위험 실질적 해소,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2018. 5. 7~8	북중 정상회담(2차)	- 한반도 비핵화 및 영구적인 평화정착에 대한 논의
2018. 5. 9~10	폼페이오 美 국무장관 방북(2차)	- 김정은 위원장 접견, 북한 억류 미국인 3명 귀환
2018. 5. 24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 한국·미국·중국·러시아·영국 등 기자단 초청
2018. 5. 26	남북 정상회담(2차)	- 판문점 선언 이행과 북미 정상회담 성공적 개최 추진
2018. 6. 12	북미 정상회담(1차)	- 공동합의문 발표(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평화체제 구축 공동 노력, 판문점 선언 재확인 및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노력, 미국 전쟁포로·전시자 유해 발굴 및 송환)
2018. 6. 19	북중 정상회담(3차)	- 중대한 문제에 대한 전략적 소통 강화, 지역평화 안정 촉진 - 북한의 경제발전과 민생 개선 지지
2018. 7. 6~7	폼페이오 美 국무장관 방북(3차)	- 미군 유해 송환 문제 및 미사일 엔진시설 논의
2018. 7. 23	北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	-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해체 작업 개시 (북미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
2018. 7. 27	미군 유해 송환	- 미군 유해 55구 송환(원산)
2018. 8. 20~26	남북 이산가족 상봉	- 8. 20~22(1회), 8. 24~26(2회) - 총 170가족 833명 상봉

자료: 각종 언론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 남북·북미·북중 정상회담의 주요 합의사항은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 안보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비핵화 논의가 진전되기 전까지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는 어려울 전망임.

- 남북은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상호 교류 활성화 등 남북 관계 개선,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전쟁위험 실질적 해소,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하였음(표 2 참고).
- 북미는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하고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완전한 비핵화, 미국 전쟁포로 및 실종자 유해 송환에 북한이 노력할 것 등에 합의하였음(표 3 참고).
- 북중 간 3차례 정상회담에서의 구체적인 합의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안건이 논의 된 것으로 알려짐.

표 2. 4.27 판문점 선언 합의사항 및 주요 내용

	합의사항	주요 내용
1	상호 교류 활성화 등 남북 관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개성) 설치 - 민족공동행사 적극 추진 -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 개최 -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 적극 추진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현대화·활용)
2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전쟁위험 실질적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방한계선 일대에 평화수역 조성 -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 등 군사회담 수시 개최
3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력사용금지 및 불가침 합의 재확인 - 단계적 군축 실현 -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없는 한반도 실현

자료: 「4.27 판문점 선언」을 참고하여 정리.

표 3. 북미 정상회담 공동합의문

	합의사항
1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2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3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고,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 약속
4	전쟁포로·실종자 유해 송환 및 수습

자료: 「2018 북미 정상회담 공동합의문」을 참고하여 정리.

나. 한반도 정세 관련 핵심 쟁점: 비핵화 및 대북 제재 완화 · 해제

■ [비핵화] 북미 간 비핵화의 개념과 시나리오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해 논의의 진전이 어려운 상태임.

- 한반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북미 간의 인식 차이로 인해 구체적인 비핵화 범위와 시나리오를 수립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 한국·미국·일본이 공유하는 비핵화의 일반적인 개념은 핵무기, 핵시설 등이 한반도(북한)에서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확장된 개념에서는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 폐기를 포함함.
- 북한과 중국이 제시하는 비핵화 개념은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이동수단(비행기, 함선) 등 한반도 핵우산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이 모두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주한미군을 포함함.³⁾
- 북한은 비핵화 프로세스와 관련하여 ‘동시 행동, 단계적 방식’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이러한 단계적 비핵화에는 일부 동의한 것으로 보이나 프런트 로딩(front-loading, 핵심적 핵능력 제거)⁴⁾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⁵⁾
- 북한은 미국의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 주장에 맞서 불가역적인 체제보장(CVIG: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Guarantee)을 요구하고 있음.
- 북한이 비핵화 노력의 일환으로 단행한 일련의 행동들에 대해 미국이 상응하는 체제보장 조치를 해야 한다는 북한의 입장과 완전한 비핵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 차이는 비핵화 논의 진전을 어렵게 하는 요인임.

3) 한편 9월 5일 방북한 대북특사단에 따르면, 북한은 종전선언은 한미 동맹약화나 주한미군 철수와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라는 우리 정부의 판단에도 공감하고 있음. 「문대통령 18~20일 방북…김정은 “트럼프 첫 임기 비핵화 희망”(종합)」(2018. 9. 6).

4) 핵심적 핵능력 제거란 핵무기, 핵물질, ICBM 폐기 또는 반출 등을 의미함.

5) “비건은 트럼프 ‘비장의 카드’…2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높아”(2018. 9. 11).

■ [대북 제재 완화·해제] 우리 정부와 미국은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 이후 대북 제재 해제와 경제협력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데에 반해, 북한은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관계개선)를 동시·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의 조기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음.

-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대북 제재 해제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 역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가 정착되어야 경제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함.⁶⁾
- 다만 트럼프 美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직후의 기자회견에서 '20% 비핵화'를 언급⁷⁾함에 따라, 상술한 프런트 로딩이 이행되면 북미 관계 정상화 또는 대북 제재 완화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6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성명을 제출하는 등 대북 제재의 조기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임.
- 북한은 대외관계 정상화와 대북 제재 완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며, 미국의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한 요구가 남북교류협력 재개와 민족화합을 방해하고 있으며 이는 부당한 간섭이라고 강조함.⁸⁾

다. 북한의 경제정책 기조 변화와 북일 경제협력의 필요성

■ 북한은 2018년 4월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핵·경제 병진노선을 중단하고 경제건설총력집중 노선을 국가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채택함에 따라, 국가재원을 경제개발에 집중하는 한편 대외관계정상화를 통한 재원조달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됨.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3년 3월 전원회의에서 핵개발과 경제발전을 병행하는 '핵·경제 병진노선'을 채택하였으나, 2018년 4월 제3차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전략노선으로 '경제건설총력집중'을 제시함에 따라 5년 만에 정책기조가 변화하였음.⁹⁾
- 핵·경제 병진노선은 핵무력 완성과 경제건설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전략인 반면, 경제건설총력집중 노선은 핵무력이 완성되었으므로 경제건설에 국가의 재원을 모두 투입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음.

■ 정책기조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대외무역은 물론 인도적 지원마저 급감하여 경제적 고립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경제개발을 위한 재원 마련이 시급함.

-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3.5%로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¹⁰⁾
- UN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2016. 3. 2)부터 북한의 주요 품목 수출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짐에 따라 북한의 대중 수출이 급감(2017년 -37.3%)하는 등 제재가 북한 경제일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그림 1 참고).
- 2018년 상반기 북한의 월별 대중 수출은 평균 약 88% 이상 감소하였으며 무역총액은 평균 약 60% 감소(표 4 참고)
- 「2018 세계인도주의지원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은 1천 10만 달러로 이는 지

6) 「전문】 문재인 대통령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사」(2018. 8. 15).

7) The White House(2018. 6. 12).

8)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근본 입장」(2018. 8. 16).

9) 「北, '핵·경제 병진→경제건설 집중' 노선전환…개혁개방 탄력」(2018. 4.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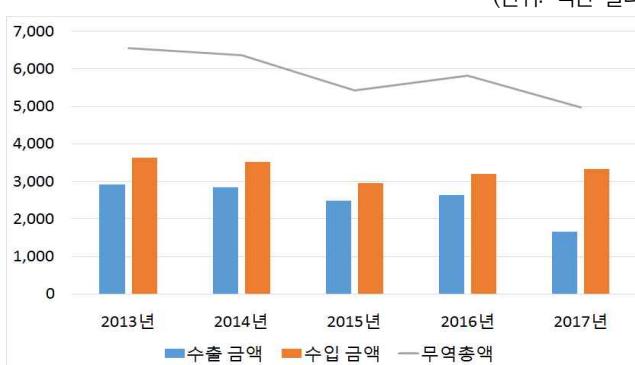
10)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19. 9. 2).

난해보다 약 60% 감소한 수치임.¹¹⁾

- 각국의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감소는 대북 사업의 모니터링 문제, 대북 제재로 인한 대북 물자전달 거부(중국) 등에서 기인함.

그림 1. 최근 북중 무역 규모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DB(검색일: 2018. 9. 2).

표 4. 2018년 북한의 대중무역 동향

(단위: 백만 달러)

	무역총액		대중 수입		대중 수출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월	205	-53.6	168	-30.1	36	-81.9
2월	111	-65.7	102	-32.4	8	-94.9
3월	154	-64.6	142	-56.4	11	-89.2
4월	173	-59.3	161	-43.0	11	-86.6
5월	230	-56.8	217	-40.3	13	-87.0
6월	217	-56.1	204	-38.8	12	-87.9

자료: 한국무역협회 DB(1~3월), 중국해관총서 DB(4~7월)(검색일: 2018. 8. 28).

■ 최근 북미 간 관계정상화 노력과 함께 북일 관계 역시 개선의 여지가 보임에 따라 비핵화 과정에서 일본의 역할과 대북 제재 해제 이후 북일 간 경협 재개에 대비하여 제반여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의 기자회견에서 ‘비핵화 비용’에 대한 질문에 ‘미국은 이미 많은 비용을 지불해왔으며, 비핵화 비용은 한국과 일본·중국 등 주변국이 도와줄 것’이라고 답변함에 따라 비핵화 과정에서 주변국의 역할을 기대함.
-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본은 3단계 대북 지원(핵사찰비 지원 → 인도적 지원 → 경제협력)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비핵화 논의가 진전되어 대북 제재가 해제되고 북한 경제의 개방이 이루어지면 북한 경제개발을 위해 주변국들이 경쟁 구도에 놓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북일 경협을 추진하기 위한 선결과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11) UNOCHA(2018), *Global Humanitarian Overview 2018*.

3. 북일 경제협력의 역사와 최근의 여건 변화

가. 북일 무역·투자 관계

■ 2000년대 초반 일본은 중국과 함께 북한의 최대 무역 상대국으로, 북한의 무역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비중은 20%(2001년)를 상회하였음.¹²⁾¹³⁾

- 2000년 및 2001년을 기준으로 일본은 북한의 최대 수출국이었으며, 중국은 최대 수입국이었음. 당시 북한의 무역에서 차지하는 두 나라의 비중은 50% 전후에 이를 정도로 의존도가 높았음.
- 북한의 수출: (2000년) 일본 2.57억 달러, 중국 0.37억 달러 / (2001년) 일본 2.26억 달러, 중국 1.67억 달러
- 북한의 수입: (2000년) 일본 2.07억 달러, 중국 4.51억 달러 / (2001년) 일본 2.49억 달러, 중국 5.73억 달러
- 북한의 수출입: (2000년) 일본 4.64억 달러, 중국 4.88억 달러 / (2001년) 일본 4.75억 달러, 중국 7.40억 달러
- 일본과 중국의 비중: (2000년) 일본 23.5%, 중국 24.7% / (2001년) 일본 20.9%, 중국 32.6%¹⁴⁾
- 다만 2001년 북한의 대일 수입에는 일본의 대북 무상 쌀 지원 50만 톤(금액 기준 1.6억 달러)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면 실제 거래성 수입은 격감한 것으로 나타남.
- 2001년 북한의 대일 주요 수출 품목은 어패류, 무연탄, 의류, 위탁가공용 전기부품 등 1차 산품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어패류가 전체 수출의 45%를 차지함.¹⁵⁾
- 대일 수입 품목은 쌀, 수송용 차량, 전기기기, 모직물, 기계류, 화학섬유 등으로 무상 지원의 쌀이 전체 수입의 43%를 차지함.

표 5. 북한의 대일 무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무역총액	475	370	265	253	194	122	9	8	3
수 출	226	234	174	163	131	78	0	0	0
수 입	249	135	92	89	63	44	9	8	3
무역수지	-23	99	82	74	69	34	-9	-8	-3

주: 일본 ERINA의 북한 무역 데이터는 KOTRA의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 연도 자료를 활용하고 있음.

자료: ERINA, 「北朝鮮の統計データ」, https://www.erina.or.jp/data/asia/economic_statistics/(검색일: 2018. 8. 10).

■ 그러나 2002년 일본안납치 문제 및 북핵 문제 대두 등 북일 간 관계 악화에 따라 이후 양국간 교역이 급격하게 감소했으며, 일본은 2006년 10월부터 대북 수입을, 그리고 2009.6월부터 대북 수출을 전면 중단하였음.

12) KOTRA(2002), pp. 8~12.

13) 1970년대 초반 동서 화해 무드(레탕트)에 따라 일본의 국회의원으로 결성된 「일조우호의원연맹」이 1972년 1월에 민간단체인 「일조무역회」와 함께 방북하여 북한의 「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무역촉진에 관한 합의서」에 조인했으며, 이에 따라 1950년 중반부터 중국을 경유하는 간접무역 형태의 북일 무역이 1970년대부터 일반적인 국제무역으로 전환되었음. 李燦雨(2001), p. 11.

14) 남북한 교역을 제외한 무역액에서의 비중임.

15) 북한의 대일 수출에서 어패류가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1999년 북한과 일본기업의 합작어로사업 추진에 따라 어획량이 증가했기 때문임. KOTRA(2001), p. 5.

- 2000년대 이후 북일 무역 감소에는 양국간 정치적 관계 악화 이외에도 일본경제의 장기 침체와 조총련계 기업의 자금사정 악화, 섬유·전자제품 등 위탁가공교역의 부진도 영향을 미쳤음.
- 일본은 2002년 'Catch All 규제'(군사전용의 우려가 있는 수출화물 및 기술 유출 규제) 도입, 2004년 외국환법 개정 및 특정선박 입항 금지법 제정, 2005년 일본농림규격(JAS)법 개정, 개정선박유타순해배상보장법 시행 등 대북 제재를 강화하였음.¹⁶⁾ 이에 따라 대북 수출입 상품 검사, 북한 선박의 입항 검사, 원산지 표시 등이 강화되면서 일본기업의 대북 거래가 위축되었음.
- 북한 무역에서 일본의 비중은 1995~2001년에 줄곧 20%대였으나, 2002년 16.3%, 2003년 11.7%, 2004년 8.8%, 2005년 6.4%로 급락함.
- 북한의 제1차(2006년 10월) 및 제2차(2009년 5월) 핵실험에 따른 UN제재결의(2006년 10월 제1718호, 2009년 6월 제1874호)와 일본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강화로 2009년 6월 이후는 북일 간 무역이 전면 중단됨.

- 북한은 1984년 9월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합영법」을 제정했으나, 북일 간 민간 차원의 합작 투자사업은 북한의 채무상환 우선 해결을 희망하는 일본기업과 합작유치를 우선하는 북한 측의 입장이 서로 달라 구체적인 진전이 없었음.¹⁷⁾
- 북한은 1970년대 초반 오일쇼크에 따라 사회주의권에서의 원조가 급격히 감소하자 국내 자본축적의 부족분을 보완하기 위해 자본주의권으로부터 공공 및 민간 차관, 민간 설비(연불) 도입을 추진함.¹⁸⁾
 - 프랑스, 서독, 스웨덴, 일본 등은 1970년대에 약 13억 달러의 차관 및 설비를 북한에 수출했는데, 이 중 일본은 총 4 억 달러(섬유 1.39억 달러, 시멘트 1.19억 달러, 항만 4,800만 달러, 전자통신 1,700만 달러, 석유화학 1,200만 달러 등)로 전체의 31%를 차지함.
 - 그러나 북한이 1970년대 중반 무역여조의 심화로 채무상환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1981년 북한의 대외상환 원리금 총액은 30억 달러로 늘어남. 이후 북한이 분할상환마저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1987년 서방은행 채권단은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함.
 - 일본수출입은행은 북한의 채무상환 능력 상실에 따라 차관 제공을 거부하고 당시 통상산업성도 수출보험업무를 사실상 중단했음. 북한은 1983년 6월까지 일본에 대해 원금 0.9억 서독마르크와 이자 300억 엔을 상환한 후 중단함에 따라 1983년 7월 기준 북한의 대일 미결제금액은 약 6.1억 서독마르크에 이르렀음.
 - 1980년대 중후반의 대북 투자는 자본주의권이 배제된 채로 주로 조총련계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음.¹⁹⁾
 - 1986~91년까지 일본 대장성에 신고된 조총련계 기업의 대북 투자는 합계 32건, 3,132만 달러였으며, 업종별로는 섬유 부문이 최대의 비중을 차지했음.
 - 한편 북한과의 경제합작의 가능성을 검토한 「일본무역회」는 1989년 10월 내부적으로 「합작대책위원회」를 설립했지만, 구체적인 합작사업의 계약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음.²⁰⁾
 - 일본 재계에서는 1995년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3개월간에 미쓰비시중공업, 신일본제철, 미쓰이물산, 도요타통상의 4개 사가 북한을 방문해 경제협력의 가능성을 타진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그 후속 내용은 없었음.
 - 북한은 대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1996년 7월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나간선봉 비즈니스촉진 대표단'(단장 김정우 위원

16) KOTRA의 2003~05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에서 일본에 대한 설명 부분을 참고.

17) 李燦雨(2016), p. 142.

18) 李燦雨(2001), pp. 11~12.

19) 위의 자료, p. 14.

20) 李燦雨(2016), p. 142.

장)을 일본에 보내 도쿄, 니가타, 도아마, 오사카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음. 합계 101건, 총액 약 64억 달러의 투자프로젝트를 제시하는 등 일본으로부터의 투자유치에 적극 나섰지만, 일본 재계의 반응은 냉랭했음.

- 1990년대 이후 일본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이전에 인도적 지원 이외의 경제협력, 즉 투자를 실시하는 것에는 반대했음. 유엔개발계획이 주도하는 두만강 지역개발에 대해서도 국교가 없는 북한이 참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일본은 정식적인 참가를 거부하였음.
- 결과적으로 일본기업의 대북 투자는 정부의 경제제재 전에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 일본기업이 대북 투자를 회피한 데에는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실험 등 군사 중시 정책 추진, 북일 간 채무상환 미이행 문제, 북한의 전기·용수도로·통신 등 인프라 정비 지연 등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했음.²¹⁾

나. 기개최 북일 정상회담과 경제협력 합의 내용

■ 2002년 9월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방북으로 최초로 북일 간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일본 측의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와 북한 측의 일본인납치 피해에 대한 인정 및 유감 표명이 이루어졌으며, 향후 국교정상화 및 경제협력 방안 등이 포함된 「평양 선언」이 채택되었음.²²⁾

- 북일 정상회담이 성사된 배경에는 11차례에 걸친 북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협상 경험을 기반으로 한 고이즈미 총리의 대북 관계 개선 및 납치 문제 해결 의지,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일본자금의 필요성 및 부시 미 대통령의 '악의 축'으로서 북한 지목(2002년 1월)에 대한 긴장 완화책 차원의 대일 관계 개선 추진²³⁾ 이외에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해빙 무드 등의 외부 여건도 작용했던 것으로 판단됨.
- 양국 정상은 북일 간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현안을 해결하며, 실의 있는 정치·경제·문화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양측의 기본 이익에 부합하는 동시에 지역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한다는 공통의 인식을 확인함.²⁴⁾
- 양측은 평양선언을 통해 국교정상화 협상 추진, 과거사 반성에 기초한 보상, 납치 등 유감스러운 사태의 재발 방지, 핵·미사일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신뢰에 기초한 협력관계 구축 등 4개 항목에 합의함.
- 특히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북일 간의 과거 역사 문제의 해결방법으로서 재산권 청구의 상호 포기와 함께 국교정상화 후에 무상 자금협력, 저금리 장기차관 제공, 인도주의적 지원, 일본국제협력은행의 응자, 신용 제공 등의 실시에 합의함.
- 북한에 대한 과거 청산(보상) 차원에서의 경제협력 방식은 2000년 8월 도쿄에서 개최된 제10차 북일 국교정상화 협상에서 처음 거론됐으며, 1965년 한일 수교 시 경제협력 방식 사례를 연구하여 접점을 찾고자 했음.²⁵⁾²⁶⁾

21) 李燦雨(2016), p. 143.

22) 제1차 북일 정상회담 이전에 북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대표적인 시도로는 1990년 9월 자민당 및 사회당 대표단(가네마루(金丸信) 자민당 단장, 다나베(田辺誠) 사회당 단장)의 방북이 있음. 이들은 김일성 총서기와 면담 후 「북일 관계에 관한 일본의 자유민주당, 사회당 및 조선 노동당의 공동선언」을 발표했음. 여기에는 '전후 45년간 조선인이 받은 손실에 대해 충분히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보상해야 한다', '조기에 국교를 수립해야 한다' 등 8개항이 포함되었음. 이후 제1차 북일 정상회담 전까지 11차례(1991~92년 8회, 2000년 3회)에 걸쳐 북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협상이 진행되었음. 松本英樹(2003), pp. 32~33.

23) 松本英樹(2003), pp. 36~37.

24) 外務省(2002), 「日朝平壤宣言」(검색일: 2018. 8. 10).

25) 松本英樹(2003), p. 35(表 3).

26) 일본 산케이신문은 제1차 북일 정상회담 당시 경제협력 자금 규모로 114억 달러(당시 약 1.6조 엔)가 언급됐다는 조선노동당 전 간부의 증언을 인용해 2012년 9월에 보도한 바 있음. 「平壤宣言から10年 日本、賠償1.3兆円密約 北元幹部証言 拉致認定条件に」(2012. 9. 18).

표 6. 제1차 북일 정상회담: 평양선언(2002년 9월 17일)

번호	선언문의 내용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선언의 정신 및 기본원칙에 따라 국교정상화를 조기에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해 2002년 10월에 북일 국교정상화 협상을 재개하기로 함.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측은 과거 식민지지배로 조선인들에게 끼친 손해와 고통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사과를 표명 - 양측은 일본 측이 국교정상화 후 무상 자금협력, 저리의 장기차관 제공 및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경제 협력을 실시하고 민간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협력은행 등의 응자, 신용제공 등을 실시하는 것이 이 선언의 정신에 부합한다는 기본인식 아래 국교정상화의 협상에서 경제협력의 구체적인 규모와 내용을 성실하게 협의하기로 함.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측은 국교정상화 시에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초한 양국 및 국민 모두의 재산 및 청구권을 상호 포기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국교정상화 협상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협의하기로 함. - 양측은 재일조선인의 지위에 관한 문제, 문화재 문제를 국교정상화 협상에서 협의하기로 함.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측은 국제법을 준수하고, 서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지 않기로 함. - 일본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현안 문제에 대해 북한은 과거의 (납치와 같은) 유감스러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기로 함.

자료: 外務省(2002), 「日朝平壤宣言」(검색일: 2018. 8. 10).

- 제2차 북일 정상회담(2004. 5. 26)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으로 이어질 북일 관계의 타개 및 일본인납치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평양에서 개최됐으며, 양측은 평양선언이 북일 관계의 기초임을 재확인함.
- 이 회담을 통해 기존 귀국자 가족 5명이 고이즈미 총리와 함께 귀국했음. 북한은 납치 문제의 진상에 대해 본격적인 재조사를 약속했으며, 한반도의 비핵화 및 미사일 발사의 동결 재확인 등이 이루어짐.
- 고이즈미 총리는 제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한 후 국교정상화를 실현하다는 입장을 강조했으며, 평양선언이 준수되는 한 제재조치를 발동할 뜻이 없음을 표명함. 또한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국제기구를 통해 식량 25만 톤 및 1,000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 등을 제공하기로 했음.²⁷⁾
- 그러나 북일 정상회담은 제1차 회담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 일본인납치 문제를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사망 8명 발표)한 이후, 일본 내 여론이 크게 악화되고 2002년 10월 제2차 북한 핵위기가 빨발하면서 더 이상의 진전을 가져오지 못한 채 중단됨.

■ 일본과 북한은 제2차 정상회담 이후에도 일본인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 간 논의를 지속해왔는데, 2014년 5월 29일 스웨덴에서 개최한 정부간협의에서 북한 내 모든 일본인에 대한 재조사(북한) 및 이에 따른 일본의 독자적인 대북 경제제재 해제(일본)를 핵심으로 한 '스톡홀름 합의'를 도출함.²⁸⁾

- [북한] 1945년 전후 북한 내에서 사망한 일본인 유골 및 묘지, 잔류 일본인, 일본인 배우자, 납치 피해자 및 행방 불명자를 포함한 모든 일본인에 대한 조사를 포괄적·전면적으로 실시. 이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조사 및 확인 사항의 대일 수시 통보 및 협의 실시, 일본 측 관계자의 북한 체류와 관계자 면담 및 관련 장소 방문 허용 등에 대해 합의
- [일본] 북한 측의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및 조사 착수 시점에 인적 왕래의 규제 조치, 송금 보고 및 휴대수출품 신고금

27) 外務省(2004), 「日朝首脳会談(概要)」(검색일: 2018. 8. 10).

28) 外務省(2014), 「日朝政府間協議(概要)」(검색일: 2018. 8. 17); 外務省(2014), 「(ストックホルム)合意文書」(검색일: 2018. 8. 17).

액과 관련한 대북 제재조치와 인도주의 목적의 북한 국적 선박의 일본입항 금지조치 해제, 일본인 유골묘지 처리, 과거 일본인 실종자에 대한 조사 지속 등에 대해 협의, 인도적 견지에서 적절한 시기에 대북 인도지원 실시 검토 등 합의

- 2개월 후인 2014년 7월 베이징에서 개최한 정부간협의에서 북한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공표 및 조사 착수를 발표하고, 이에 대해 일본은 인적 왕래 규제조치 및 휴대수출신고 하한금액 인하조치 해제, 인도주의 목적의 북한 선박 입항을 허가했음.

글상자 1. 일본인납치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

■ 일본정부는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에 대해 일본의 주권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중대한 문제로서 국가의 책임으로 해결해야 할 시급한 중요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

- 일본정부는 17명을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납치 시기와 피해자는 1977년 3명, 1978년 10명, 1980년 3명, 1983년 1명임.
 - 이외에 납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행방불명자 883명(2017년 4월 기준)에 대해 국내외에서 정보수집, 수사 및 조사를 지속 진행
 - 또한 1973년 일본 내에서 실종된 조선(북한) 국적의 남매 2명의 실종사고를 북한에 의한 납치로 판단하고 있음.
- 일본 당국에 의한 수사 및 망명한 북한 공작원의 증언을 통해 이들 사건의 대부분이 북한에 의한 납치 가능성에 높다고 판단함.

표 7. 일본인납치 문제 관련 북일 간 협상 과정

시기	주요 회의 및 내용
2002년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차 북일 정상회담(평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일본인납치를 처음으로 인정·유감을 표명, 납치 피해자 5명의 생존을 확인해줌. (* 이 회담을 통해 평양선언이 발표되었음.)
2002년 9~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실조사팀을 평양에 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치 피해 관련 사실조사팀이 생존자와 면담 및 안부 미확인자에 대해 정보수집 실시
2002년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치 피해자 5명 귀국
2004년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차 북일 정상회담(평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이즈미 총리는 북한을 재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납치 문제, 핵·미사일 등 안전보장 문제에 대해 논의 · 기존 귀국자의 가족 5명이 고이즈미 총리와 함께 귀국. 7월에 별도로 기존 귀국자의 가족 3명이 귀국·방일함.
2004년 8~9,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일 실무자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제시한 요코타 메구미 씨의 '유골'이라고 한 뼈의 일부에서 메구미 씨와 다른 DNA가 검출되어 일본정부는 북한에 강력히 항의
2006년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일 포괄병행협의(베이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생존자의 귀국, 진상규명을 위한 재조사, 피의자의 인도를 거듭 요구 · [북한] '생존자는 이미 모두 귀국했다'는 종래와 같은 설명을 되풀이
2007년 3,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차 북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작업부회 회담(3월, 하노이), 제2차 회담(7월, 울란바토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 2월 6자회담에서 설치하기로 한 '북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작업부회'의 두 차례에 걸친 회담에서 납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이 없었음.
2008년 6,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일 실무자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6월 베이징 협의에서 일본은 북한이 납치 문제를 포함한 제반 현안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보일 경우 일본의 대북 제재조치 중 일부를 해제하겠다고 표명. 이에 대해 북한도 과거와 달리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재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 · 2008년 8월 선양 협의에서는 북한의 납치 문제 재조사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 합의. 그 결과 북한 측은 권한이 부여된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모든 납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존자 발견과 귀국을

	<p>위한 전면적인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으며, 일본 측도 인적 왕래의 규제를 해제하고 항공기 전세편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기로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러나 북한은 갑작스러운 일본 정권 교체(당시 후쿠다 총리 사임)로 조사 개시를 보류
2012년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차 북일 정부간협의(울란바토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4년 만에 협의를 개최해 당시까지의 경위와 양측의 입장에 대해 논의함. 12월에 제2차 협의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예고에 따라 연기
2014년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일 정부간협의(베이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년 4개월 만에 양측 정부간(과장급) 비공식의 의견 교환을 실시하고, 정부간협의 재개를 조정하기로 합의
2014년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일 정부간협의(스톡홀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은 납치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일본인에 관한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조사 실시를 약속(스톡홀름 협의) 일본은 북한 측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를 시작하는 시점에 일본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조치의 일부를 해제하기로 함.
2014년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일 정부간협의(베이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7월 1일 베이징 협의를 바탕으로 7월 4일 북한은 국영언론을 통해 특별조사위원회의 권한, 구성, 조사 방법 등에 관해 국내외에 공표하고, 납치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일본인에 관한 조사를 시작하기로 발표 이에 따라 일본은 인적 왕래 규제조치 및 후대수출신고의 하한금액 인하조치 등에 대해 해제하고, 인도주의 목적의 북한 선박 입항을 허가
2014년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일 외교당국 간 회담(선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은 일본 측에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현황에 대해 설명
2014년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조사위원회와의 협의(평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측은 특별조사위원회와의 협의에서 최우선과제로서의 납치 문제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모든 납치 피해자의 안전확보 및 즉각적 귀국 등을 요구. 신속한 조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북한에 요청 북한 측은 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최고지도기관인 국방위원회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며, 이외에 위원회의 체제, 조사 방침 및 내용 등에 대해 설명
2016년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의 일방적인 특별조사위원회 해체 선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6년 1월 북한의 핵실험 및 2월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따라 일본은 2월에 독자적인 대북 조치를 발표 이에 대해 북한은 포괄적 조사의 전면 중지 및 특별조사위원회 해체를 일방적으로 선언 일본은 스톡홀름 협의에 따라 조기에 모든 납치 피해자를 귀국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

자료: 日本政府拉致問題対策本部(2017), pp. 5~9.

■ 일본정부는 납치 문제를 기본적 인권 침해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보편적 문제로 인식하고, 국제기구, 다자간 협의, 양자 회담, 국내 대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 유엔에서는 북한인권상황결의를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 양쪽에 제출
- 6자(남북한미중러일)회담에서 납치 문제를 제기. 2005년 9월 공동성명에서 납치 문제를 포함한 각종 현안의 해결을 바탕으로 국교정상화 조치를 도입하는 것이 6자회담 목표의 하나가 됨. 2007년에는 북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작업부회 설치 등이 결정됨.
- G7 정상회담, ASEAN 관련 정상회담 등 다자간 협의와 미·한·중·러와의 정상회담, 외무장관회담 등 양자회담에서 납치 문제를 제기
- 국내 대처 차원에서 2013년 1월 납치 문제대책본부(본부장: 총리)를 설치하고, 귀국한 납치 피해자들의 협력을 통한 수사 조사 실시. 또한 북한 공작원 등 납치에 관여한 11명을 국제수배하고, 납치 문제에 관한 홍보 및 이해 촉진 활동을 전개

■ 일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납치 문제 해결 요구 불응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의 제재와 함께 독자적인 대북 제재조치를 실시해옴.

- 일본은 2006~13년에 다섯 차례에 걸쳐 북한으로의 도항 자체 요청, 북한 국적자의 입국 원칙 금지,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 북한과의 수출입 금지 등 독자적인 대북 조치를 실시
 - 2014년 스토훌름 협의 이후 일부 대북 제재를 해제했으나, 2016년 북한의 핵실험·탄도미사일 빌사에 따라 인적왕래 규제조치 강화, 휴대수출신고의 하한금액 인하조치, 대북 지불 원칙 금지조치, 모든 북한 선박과 북한에 기항한 제3국 일본 선박의 입항 금지조치, 자산동결 대상의 단체개인의 추가확대 지정 등을 실시
- ※ 한편 UN 안보리의 대북 제재는 지금까지 총 10차례 채택됐으며, 제5차 제재인 2016년 3월의 안보리 제재 2270호부터 제재의 성격이 바뀜(임소정 2018, pp. 5~6).
- 제1차(2006년 10월)~제4차(2013년 3월) 제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의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제5차 제재부터는 북한의 주요 수출입 품목 제재, 북한의 노동자 파견 및 경협 금지 등 경제일반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전환됨.

자료: 日本政府拉致問題対策本部(2017), pp. 2~18을 바탕으로 정리.

다. 북일 경제협력 관련 최근의 여건 변화

■ 일본의 북한에 대한 기본 인식은 지난 8월에 발표된 『2018년 방위백서』에 나타나 있듯이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최근 한반도 정세의 변화에 따라 북일 정상회담의 개최를 시도하는 와중에 향후 북일 경제협력의 방향에 대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음.

- 일본정부는 『2018년 방위백서』에서 6월 북미 정상회담 후 현재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기본적 인식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힘에 따라,²⁹⁾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임.
- 일본 방위백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금까지 없었던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협’으로 규정하면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의사를 문서 형태로 약속한 것은 의의가 크다고 지적함.
- 아베 총리는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직후 일본인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직접 대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함.³⁰⁾
- 이미 2월에 아베 총리는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여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대화하고 일본인납치 문제의 해결을 요청한 바 있음.
- 아베 총리는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일본인납치 문제를 제기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일본과의 대화에 개방적인 자세를 보임에 따라, 납치 문제 해결을 전제로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임.³¹⁾
- 북미 정상회담 직후인 6월 14일 일본 외무성 간부가 몽골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북한 외무성 관계자와 비공식적으로 접촉하고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을 전함.
- 7월 북일의 정보기관 간 접촉은 북미 관계의 진전 확인, 납치 문제 해결과 북일 관계의 진전을 목표로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8월에는 고노(河野太郎) 외무장관이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가해 북한 라용호 외무상과 접촉함.
- 지난 6월 일본 언론에서는 북일 정상회담 장소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동방경제포럼), 미국 뉴욕(유엔 총회), 싱가포르 등

29) 防衛省(2018), p. 65.

30) 「日朝膠着 打開に苦心、極祕接觸、政府、情報機関も活用」(2018. 8. 30).

31) 「首相、日朝会談に前向き、拉致解決へ‘正恩氏、決断を’」(2018. 6. 17).

제3국, 평양 등이 거론됨.³²⁾

표 8. 2018년 일본정부 차원의 대북 대화 현황

시기(2018년)	주요 내용
2월	- 아베 총리가 방한(평창올림픽 개막식 참석) 시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대화하고, 일본인납치 문제의 해결을 요청
6월	-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참사관이 몽골의 국제회의에서 북한 참석자와 대화
7월	- 기타무라(北村滋) 내각 정보관(한국의 국정원장 위치)이 북한 김성혜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전략실장과 베트남에서 비밀회담 개최(<i>The Washington Post</i> , 8월 28일 보도)
8월	- 고노(河野太郎) 외무장관이 싱가포르에서 북한 리용호 외무상과 대화 * 북한은 구속하고 있던 일본인 남성을 베이징의 대사관 루트를 통해 석방(26일)

자료: 「日朝膠着 打開に苦心、極秘接觸、政府、情報機関も活用」(2018. 8. 30)을 일부 보완.

-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일 간 정상회담이 모색되고 있는바, 일본의 대북 경협은 협상용으로 활용되고, 이는 핵 사찰 비용 부담 → 인도 분야 협력 → 경제협력의 3단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6월 11일 도쿄에서 개최된 '제24회 아시아의 미래' 회의에서 아베 총리는 북한이 일본인납치 및 핵·미사일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면, '불행한 과거 청산 및 국교정상화를 통해 경제협력을 할 의향이 있다'고 발표³³⁾
- 6월 13일 스가(菅義偉) 관방장관은 "IAEA가 북한의 핵 사찰(검증) 활동을 재개할 때 초기 비용을 지원할 뜻이 있다"고 밝힘. 이것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12일 기자회견에서 '일본과 한국이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함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의향을 나타낸 것임.³⁴⁾
- 6월 16일 아베 총리는 북한의 비핵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에 대한 자금제공 의사를 밝힘.³⁵⁾
- 최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대북 경협자금의 규모는 1조 엔 이상(100억 달러)이 될 것으로 예상됨.³⁶⁾
- 단 일본 내에서는 북한이 일본인을 납치하고 핵·미사일로 위협하는 국가이므로, 대북 경협자금 제공에 대한 논의가 표면화하면 국내 여론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표 9. 일본의 대북 3단계 경제협력 방안

현재 논의 내용	과거 관련 논의 내용
1단계 핵 사찰 비용 → IAEA 사찰의 초기비용을 부담	[1단계] 북한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IAEA의 사찰이 불가피 · 2007년 IAEA 북한 영변 핵사찰 시 일본은 50만 달러 제공
2단계 인도분야 → 쌀과 의약품	[2단계] 2014년 스톡홀름 협의에서 적절한 시기에 대북 인도적 지원 실시 검토를 명기했음. 단, 납치 피해자의 생사 확인과 귀국 실현을 전제로 함.
3단계 경제협력 → 국교정상화 후에 인프라 정비	[3단계] 2002년 평양선언에서 국교정상화 후에 무상 자금협력과 국제협력 은행(JBIC)을 통한 대출 등의 내용 포함

자료: 「北朝鮮支援、3段階用意、核查察費用・人道分野・経済協力、平壤宣言が条件」(2018. 6. 14).

32) 「日朝会談‘第三国’浮上の思惑、ロシア・米国…、国際会議日程の利点」(2018. 6. 18).

33) 「首相‘インフラ投資融資5.5兆円、インド太平洋地域で、第24回アジアの未来、対北朝鮮、懸案解決なら経済協力」(2018. 6. 12).

34) 「北朝鮮支援、3段階用意、核查察費用・人道分野・経済協力、平壤宣言が条件」(2018. 6. 14).

35) 「首相、日朝会談に前向き、拉致解決へ‘正恩氏、決断を’」(2018. 6. 17).

36) 「日朝正常化、経済協力が切り札——拉致問題、ちらつく1兆円、巨額の拠出、世論・財源が焦点(真相深層)」(2018. 8. 17). 한편 국내의 삼성증권은 2002년 평양선언 당시의 자불 제안설이 있었던 100억 달러에 물가상승률 및 환율 변화 등을 반영하면 북한의 대일청구권은 현재 가치로 2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 함. 삼성증권(2018), p. 39.

4. 북일 경제협력의 진전을 위한 과제

■ 한반도 정세 변화와 관련한 핵심 쟁점인 비핵화와 대북 제재 완화·해제를 둘러싸고, 각국의 입장 차이로 인해 예상보다 북미 관계 및 북한의 대외관계 정상화가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음.

- 8월 24일 트럼프 美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중국이 비핵화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제4차 방북 계획을 무기한 연기한 바 있음.³⁷⁾
- 단, 9월 5일 대북 특별사절단의 방북과 9월 9일 북한 정권수립 70주년 행사(핵미사일 없는 열병식 진행) 이후 한반도 정세가 재차 긍정적인 상황으로 변화되고 있음.
 - 9월 5일 대북 특별사절단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면담, 김영철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과의 협의 등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 일정(9월 18~20일, 평양) 합의, 김정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 재확인, 남북 및 미국과 긴밀한 협력 지속 의사 표명,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등의 결과를 도출함.³⁸⁾
 - 9월 10일 미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긍정적인'(very warm) 친서를 받았으며, 2차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힘.³⁹⁾

■ 금년 들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일 간 접촉이 잦아지는 등 북일 정상회담의 개최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 있음.

- 북미 정상회담 이후 일본은 북한과 공식적(외무성 6월, 8월), 비공식적(정보기관 7월)인 접촉을 통해 양자간 정상회담과 관계 개선을 위한 물밑 작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최근 아베 총리는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방일하여 '9월 5일 특사단의 방북 성과'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에서도 "직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때"라며,⁴⁰⁾ 지속적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의욕을 보였음.
- 또한 북한 정권수립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이노키(アントニオ猪木) 참의원 의원이 일본 초당파 국회의원단의 조기 방북 수용을 제안하고, 이에 대해 리수용 조선노동당 부위원장이 환영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⁴¹⁾ 정상회담 이전에 일본 국회의원단의 방북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음.

■ 향후 북일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 논의의 진전과 함께 양측 간의 현안 타개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전제로 구체적인 방안의 수립이 가능하게 될 것임.

- [경협 조건] 일본은 대북 관계에서 2002년 평양선언에 따라 납치, 핵·미사일과 같은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여 북일 국교정상화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으므로, 북일 간 관계 개선은 이러한 비핵화 및 납치 문제라는 현안 해결의 진전 여하에 좌우될 것으로 판단됨.
- 최근 일본 내 북한 전문가에 따르면, 북한의 핵무기 폐기는 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장기적인 것이 될 것으로 일본

37) 「폼페이오 방북 연기… 트럼프식 ‘판 흔들기’」(2018. 8. 25).

38) 「대북 특별사절단 방북 결과 발표 [오늘의 브리핑]」(2018. 9. 6).

39) “Trump planning second North Korea summit after Kim's 'very warm' letter”(2018. 9. 10).

40) 「서훈 日에 방북성과 설명…“아베, ‘김정은 직접 만날 때다’”(종합2보)」(2018. 9. 10).

41) 「アントニオ猪木参院議員：議員団訪朝を北朝鮮に提案」(2018. 9. 12).

은 북한에 대해 압력 일변도의 외교가 아니라 장래 경제협력 구상을 포함한 장기적인 전략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됨. 일본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인 납치 문제도 핵무기 폐기 논의와 함께 북일 국교정상화의 협상 과정에서 포지셔닝을 잘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함.⁴²⁾

- 북일 간 현안 해결과 관련해 일본의 입장에서는 2014년 스톡홀름 합의에 따라 북한이 설치한 일본인납치 관련 특별조사위원회의 재가동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짐.
- [경협 단계] 일본의 대북 경제협력은 핵사찰 비용 부담 → 인도 분야 협력 → 자금제공 등 경제협력과 같이 단계적으로 진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핵사찰 비용 및 인도 분야의 협력은 북미 관계의 개선에 따른 한반도 정세의 진전에 의해서도 가능하겠지만, 자금제공 등의 경제협력은 특히 납치 문제의 해결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북한의 대외관계가 정상화되면 IMF, ADB, World Bank와 같은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통해 개발재원 마련을 모색할 수 있는 데, 일본은 ADB의 최대 주주이므로 북한이 ADB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북일 관계 정상화가 선결되어야 함.⁴³⁾
- [경협 분야]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 이후 대북 경제협력은 현재 왜곡된 북한 경제구조를 개선하여 장기 성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북한 경제는 현재 중국 일변도(2016년 92.7%) 및 무연탄 일변도(42% 이상) 수출⁴⁴⁾이라는 기형적인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역 상대국의 다변화와 의류, 전자제품, 소프트웨어 산업 등 북한이 비교우위를 가진 수출산업을 육성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⁴⁵⁾
- 일본의 입장에서는 석탄, 희토류 및 희소금속(rare metal), 어패류, 위탁가공용의 섬유류, 전자기기, 일본제의 기계설비 등의 부문에서 비즈니스 기회가 있을 것임.⁴⁶⁾
- [한일 협력]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실현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일본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한일 간 소통과 협력의 강화가 긴요함. **KIEP**

42) 田中均, 伊集院敦(2018), p. 1.

43) 최장호, 최유정(2018), p. 77. 북한은 1993년, 1997년, 2000년 세 차례 ADB 가입을 시도하였음.

44) KOTRA(2017), p. 1.

45) 김규철(2018), p. 6.

46) 李燦雨(2016), p. 144.

부표 1. 북한의 산업생산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경제협력 분야

구분		내용
식량부족 해소	북한의 기존 정책	- 종자혁명과 감자재배혁명, 이모작 면적 증대 - 축산기지 조성(양계장 등), 양어(養魚) 증산 - 포전(圃田) 담당제도 실시
	북일 경제협력 가능 분야	- 농업분야: 종자개량 기술협력, 비료지원, 비료공장 개량, 수해방지대책 기술협력, 농업기계화 - 축산 분야: 사육 기술협력, 사료공장 건설 - 수산 분야: 어선 제공, 장비 개량, 수산물가공공장 건설
전력부족 해소	북한의 기존 정책	- 석탄증산, 발전소 개·보수 - 수력발전소 건설 - 신기술 도입(전력계통의 컴퓨터화)
	북일 경제협력 가능 분야	- 송배전시설 개선, 발전소 개·보수 - 발전기 제공
생산재·부품·소재·원료 부족 해소	북한의 기존 정책	- 자력갱생에 기초하여 국내에서 조달이 가능하도록 노력 - '자강력 제일주의'
	북일 경제협력 가능 분야	- 기계류: 각종 산업기계, 공자기계, 건설용·광산용 기계, 전기기기, 수송기계, 정밀기계 등 제공 - 산업부품·소재·원료: 전자부품, 화학원료, 특수섬유, 종이, 플라스틱, 철강제품 제공

자료: 李燦雨(2016), p. 146.

부표 2. 북일 '경제협력자금'의 용도에 관한 계산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내용		비율	금액
지원성 협력	식량지원·농수산업 개발	농업 분야	종자개량 기술, 비료 지원, 비료공장 개량, 수해방지대책 기술, 농업기계화	6	600
		축산 분야	사육 기술, 사료공장 건설	1	100
		수산 분야	어선, 장비 개량, 수산물가공공장 건설	3	200
	전력생산	발전정상화	송배전시설 개선, 발전소 보수, 발전기 제공(20만 kw)	10	1,000
					20 2,000
생산 정상화 협력	생산재 제공	광업	광석채굴 설비, 수송기계, 탐사 설비	3	300
		금속·기계	CNC공작기계, 철강설비·기술, 산업기계	3	300
		화학	석유화학 설비·기술, 석탄청정화 기술	3	300
	원자재 제공	섬유, 화학, 금속, 건설	건설자재, 석유화학공업 원료, 플라스틱, 철강, 종이, 기계부품	6	600
					15 1,500
수출산업지원	수출·위탁 가공 활성화	섬유·의류, 비철금속, 전기·전자	정련설비, 위탁가공설비, 원자재 및 부품, 신규공장 건설	10	1,000
인프라 개발 협력	물류·교통	철도	철도시설 근대화, 역사 정비, 시스템 전산화	10	1,000
		도로	도로 포장, 신규 도로 건설	10	1,000
		항만	항만 정비, 하역설비 근대화, 공항 정비	10	1,000
		통신	유선통신 정비, 이동통신 협력	5	500
	공업단지		나선시 등 기반시설 정비(용수, 전력, 통신, 교통), 제도 정비	10	1,000
					45 4,500
인재육성·지적 협력	기술교육	(가칭) 북일우호기술훈련센터 설립, 기술전문학교 설립, 학교실험시설 정비	3	300	
	문화·지적 교류	(가칭) 북일문화역사박물관 설립, 경제연구소 설비·자료 제공	2	200	
				5	500
생활기반시설·환경협력		상하수도 정비, 폐기물처리시스템 정비, 의료시설 정비, 환경보호사업	5	500	
합계				100	10,000

자료: 위의 자료, p. 147.

참고문헌

[국문자료]

- 김규철. 2018. 「북한의 무역, 양적 성장만으로 충분한가?」. 『KDI FOCUS』(통권 제 93호). 한국개발연구원.
- 삼성증권. 2018. 「북한투자전략 보고서: 한반도 ‘CVIP’의 시대로」.
- 임소정. 2018.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현황과 전망」. KIEP 기초자료 18-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최장호, 최유정. 2018. 『체제전환국의 WTO가입경험과 북한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KOTRA. 2001. 「2000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 _____. 2002. 「2001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 _____. 2017. 「2016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 _____. 「북한의 대외무역동향」(2001~05년도).

[영문자료]

- The White House. 2018. "Press Conference by President Trump." (6. 12)
 (URL: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press-conference-president-trump/>)
- UNOCHA. 2018. *Global Humanitarian Overview 2018*.
-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P.R.CHINA(中国海关总署). 2018. *China's Customs Statistics*. 4, 5, 6 각 월호.

[일문자료]

- 李燦雨. 2001.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の外国資本導入史」. 『ERINA REPORT』, Vol. 41. 公益財団法人環日本海経済研究所(ERINA).
- 李燦雨. 2016. 「第8章 日朝経済関係の歴史と展望—貿易投資の変遷と懸案解決後の準備」. 『北朝鮮リスクと日韓協力』. 日本経済研究センター(JCER).
- 外務省. 2002.「日朝平壤宣言」. https://www.mofa.go.jp/mofaj/kaidan/s_koi/n_korea_02/sengen.html(검색일: 2018. 8. 10).
- 外務省. 2004.「日朝首脳会談(概要)」. https://www.mofa.go.jp/mofaj/area/n_korea/abd/sk_0405.html(검색일: 2018. 8. 10).
- 外務省. 2014.「(ストックホルム)合意文書」. <https://www.mofa.go.jp/mofaj/files/000040352.pdf>(검색일: 2018. 8. 17).
- 外務省. 2014.「日朝政府間協議(概要)」. https://www.mofa.go.jp/mofaj/a_o/na/kp/page4_000494.html(검색일: 2018. 8. 17).
- 小倉和夫. 2015. 「第8章 日本にとっての朝鮮半島—歴史的関係と将来展望」. 『転機の朝鮮半島—地政学的变化と北朝鮮経済』. 日本経済研究センター(JCER).
- 西野純也. 2015. 「第9章 日朝協議の再開 合意、そして停滞： 拉致問題再調査をめぐる日本の対北朝鮮政策」. 『朝鮮半島のシナリオ・プランニング』. 日本国際問題研究所(JIJA).
- 日本政府拉致問題対策本部. 2017. 「北朝鮮による日本人拉致問題-1日も早い帰国実現に向けて」.
- 松本英樹. 2003.「日朝国交正常化交渉の経緯と朝鮮半島をめぐる最近の動向」. 『レファレンス』(631). 国立国会図書館.

防衛省. 2018. 『2018年版防衛白書』.

田中均伊集院敦. 2018. 「北朝鮮の非核化は長期の過程で求められる日本の戦略的外交」. 『米朝首脳会談後の北東アジアセミナーレコード』. 日本経済研究センター(JCER).

[언론 자료]

「대북 특별사절단 방북 결과 발표 [오늘의 브리핑]」. 2018. 『KTV국민방송』. (9. 6)

「문대통령 18~20일 방북…김정은 "트럼프 첫 임기 비핵화 희망"(종합)」. 2018. 『연합뉴스』. (9. 6)

「비건은 트럼프 '비장의 카드'…2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 높아」. 2018. 『연합뉴스』. (9. 11)

「"북한, 일본 국회의원단 방북에 환영 표명" 이노키 참의원」. 2018. 『Newsis』. (9. 12)

「北、'核·経済 弾道→経済建設 開拓' 論議…開拓開拓」. 2018. 『連合ニュース』. (4. 21)

「서훈, 日에 방북성과 설명…"아베, '김정은 직접 만날 때다'"(종합2보)」. 2018. 『연합뉴스』. (9. 10)

「스가 일본 관방 장관 "북 비핵화 진행돼 IAEA 검증 재개되면 비용 지원할 것"」. 2018. 『아시아경제』(6. 13)

「아베 "김정은과 회담 희망…현재 정해진 것은 없다"」. 2018. 『연합뉴스』. (9. 12)

「[전문] 문재인 대통령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사」. 2018. 『중앙일보』. (8. 15)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근본 입장」. 2018. 『노동신문』. (8. 16)

「폼페이오 방북 연기… 트럼프식 '판 훈들기'」. 2018. 『MIDAS』. (8. 25)

「アントニオ猪木参院議員：議員団訪朝を北朝鮮に提案」. 2018. 『毎日新聞』. (9. 12)

「外務省、北朝鮮専門の課を7月に新設 日朝協議に備え」. 2018. 『日本経済新聞』. (6. 26)

「北朝鮮支援、3段階用意、核查察費用・人道分野・経済協力、平壤宣言が条件」. 2018. 『日本経済新聞』. (6. 14)

「首相 'インフラ投融資5.5兆円'、インド太平洋地域で、第24回アジアの未来、対北朝鮮、懸案解決なら経済協力」. 2018. 『日本経済新聞』. (6. 12)

「首相、日朝会談に前向き、拉致解決へ‘正恩氏、決断を’」. 2018. 『日本経済新聞』. (6. 17)

「日朝会談‘第三国’浮上の思惑、ロシア・米国…、国際会議日程の利点」. 2018. 『日本経済新聞』. (6. 18)

「日朝膠着 打開に苦心、極秘接触、政府、情報機関も活用」. 2018. 『日本経済新聞』. (8. 30)

「平壤宣言から10年 日本、賠償1.3兆円密約 北元幹部証言 拉致認定条件に」. 2018. 『産経新聞』(大阪朝刊). (9. 18)

「拉致再調査合意は「無効」—北朝鮮の担当幹部が明言」. 2018. 『共同通信』. (9. 7)

“I remember Pearl Harbor’: Inside Trump’s hot-and-cold relationship with Japan’s prime minister.”
2018. *The Washington Post*. (8. 28)

“Trump planning second North Korea summit after Kim's 'very warm' letter.” 2018. *The Guardian*. (9. 10)

2018 북미정상회담 공동합의문: “Trump and Kim joint statement from the Singapore summit.” 2018. *The Washington Post*. (6. 12)

4.27 판문점 선언: 「[남북 공동선언문 전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2018. KBS NEWS. (4. 27)

[기타 자료]

ERINA. 「北朝鮮の統計データ」. https://www.erina.or.jp/data/asia/economic_statistics/(검색일: 2018. 08. 10).

한국무역협회 DB. <http://www.kita.net/>(검색일: 2018. 8. 28).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검색일: 2018. 9. 2).